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08
----------	-------

발의연월일 : 2025. 4. 22.

발 의 자 : 허성무 · 김문수 · 최민희
이광희 · 윤준병 · 송재봉
이수진 · 전재수 · 김성환
김태선 · 이병진 · 조계원
박선원 · 김병주 · 안도걸
의원(15인)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변 속에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인공지능(AI) 기술,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역 소멸,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

심 기술과의 융합과, 청년 인재 유입 등 산업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착공 후 4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주거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과정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 25조).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고용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2. “신산업 전환”이란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활성화”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인력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문화와 신산업이 융합되어 유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5.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6.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전환, 기술의 융합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3.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투자 자본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연구·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위원 1명을 두며, 간사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및 지원

제9조(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착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3.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역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관한 시책
4. 첨단기술과 문화공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5. 산업단지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공지능·로봇 산업 관련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2.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인공지능·로봇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학과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책을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전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도시 전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사

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재정 건전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 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의 지정,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

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2. 지역 외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3. 그 밖에 지역인재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내용,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원활한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정

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